

“변전소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야”

김동철 한전 사장, ‘빅스포’ 간담회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불허 논란 주민 인센티브 등 수용성 방안 고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불허 결정과 관련 “변전소는 이제 파출소처럼 국민과 함께 더불어사는 걸로 국민이 이해할 때가 됐다”며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일 오후 ‘빅스포 2024’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자파 국제 기준은 200 마이크로테슬라로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83마이크로테슬라를 유지하고 있다. 전자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물론 (주민들과의)소통이 부족해서 벌어진 문제라고 보지만, 이제 국민들이 근린생활시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 아트센터는 4층까지 변전소가 2개나 있고, 5층부터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전국에 수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빌딩에는 변전소가 있고, 아파트에도 변전설비가 있다. 변전소는 우리 생활의 일부”라고 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8월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옥내화 건설 등 4건의 허가신청을 전자파를 우려하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했다. 해당 사업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의 일환으로, 한전은 하남시 갑 일동 일대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 HVDC 변환설비를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 6일 에너지산업 박람회 ‘빅스포 2024’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전

의 해당 건설 불허 처분에 한전은 경기도에 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 내달 16일 1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동서울 변전소 건설이 미뤄지며,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 송전망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철수 전력계통본부장은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발전설비는 전부서해안이나 동해안에 있다보니 수도권에 대규모 송전망 건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심판)심리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 본부장은 국내 14개 송전선로(1153km) 사업과 관련 입지선정 설명회를 하고 있다며 “토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토지 소유주에 대한 토지 사용 협의의 진행 시 조기 협의하는 소유주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 주민 수용성 향상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 것과 관련 “정부가 물가나 소비

심리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면서도 “아직도 지난 2021년~2023년까지 원가 인상요인이 다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말까지 자체 사채 발행이 2배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주태양요금을 포함해 모든 중별 전기요금이 아직도 원가 밀돌고 있다고 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트럼프 당선시 향후 미국 시장 진출 전망에 대해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한전 관계자는 “미국은 전력망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누가 당선되든 이걸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중부 텍사스 동부 중서부 등등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송전망 사업들의 발주가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예정돼 있다. 그런 부분을 미국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고 향후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다문화 결혼 급증, 전체 결혼의 10% 넘어

통계청,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지난 2020년 초 이후 1~2년간 코로나19 탓에 줄어든 바 있는 국제결혼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0쌍 가운데 1쌍 이상의 혼인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이뤄졌다. 신랑은 45세 이상, 신부는 30대 초반이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431건으로, 전년대비 17.2%나 늘었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20년(1만6200건)과 2021년(1만3900건) 등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후 2022년 반등을 시작했고 2023년 2만 건대를 4년 만에 회복했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0.6%로 1.5%포인트(p) 커졌다. 이 수치 역시 2015년 7.4%→2016년 7.7%→2017년 8.3%→2018년 9.2%→2019년 10.3% 등 꾸준히 늘고 있었다. 이후 2020년(7.6%)과 2020년(7.2%)에 쪼그라들었다가 2022년 회복세에 들어섰다.

다문화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이 6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인 남편 17.9%, 귀화자 12.3% 순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의 경우 45세 이상의 비중이 33.2%로 가장 컸고, 30대 초반(18.6%), 40대 초반(17.0%)이 그 뒤를 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아내의 경우 30대 초반이 비중이 23.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20대 후반(22.6%), 30대 후반(15.2%) 순이었다.

다문화 혼인 중 남편과 아내 모두 초혼인 비중이 5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두 재혼(19.0%), 아내만 재혼(13.3%), 남편만 재혼(11.4%) 순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베트남 혼인 건수가 회복되고 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 비중은 베트남이 27.9%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비중은 전년에 비해 4.9%포인트(p) 증가했다. 건수로는 1696건 증가한 5697건을 기록했다. 중국(17.4%)은 0.4%p 줄면서 2위로 밀려났다. 건수도 3324건에서 3104건으로 220건 감소했다. 3위 태국은 1.2%p 줄어든 비중 9.9%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농식품부, ‘저탄소인증 농산물’ 적극 도입

이마트 등 국내 6개 유통사와 협약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국내 6개 유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저탄소 농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이마트와 마켓컬리, 롯데마트, 현대그린푸드, 올가홀푸드, 농협경제지주가 참여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대상이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에 한해 인증하는 제도다.

최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강화 추세로 저탄소 인증 농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유효인증 농가는 2019년 3976곳에서 지난해 9085곳으로 100% 넘게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계 변화가 소비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6개 유통사와



국내의 한 친환경 농산물 매장. /뉴스

유통·소비 활성화에 협력한다. MOU 참여 유통사들은 올해 대비 내년도 저탄소 농산물 물량을 5~10%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일부터는 저탄소 농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각 유통사의 일부 지점에서는 저탄소 농산물을 1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배달 오토바이’ 전기차 전환 속도 낸다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 협약’ 2026년까지 비중 20%로 확대

정부, 지자체, 기업은 저소음 등 친환경 배달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배달용 내연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데 힘을 모은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장 3층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서울시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 등 총 8개 기관대표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attery Swapping Station)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륜차 종류와 상관없이 국가표준(KS)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 6일 에너지산업 박람회 ‘빅스포 2024’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전

맞는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소유자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서 완충 배터리를 대여해 별도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한다.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홍보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돕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화재예방 등 안전한 전기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내연이륜차 대비 전기이륜차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시 내 등록 이륜차 총 42만6000대 중 전기이륜차는 약 1만6000대(3.7%)에 그친다.

기업들은 화재에 안전한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업계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전기이륜차 운행이 늘고, 소상공인 사이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관심이 높아 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공무원 부부, 출산·육아 등 지원 강화

권익위, ‘전출제한기간’ 예외적용 권고

앞으로 공무원 부부가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서로 다른 근무지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 어려워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맞벌이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결혼이나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공무원, 육아기 공무원 등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출을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임신·육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이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전출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 장기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세종=김대환 기자